

“목포대·순천대 통합, 글로벌 거점 국립대 선도모델”

金 “역사적 쾌거... 의대 신설 최선”
대형 국책과제·RISE 등 전폭 지원
정부 추천·예비 인증평가 신청 절차
정부·국회에 의대 정원 배정 등 건의

전남도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합의와 관련,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의 선도모델로 육성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포대·순천대,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는 역사적 쾌거로, 도민과 함께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전남도 또한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통합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뜻하지 않은 갈등도 있었지만, 도민의 성원과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지난 15일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했다”며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통 큰 결단을 내린 양 대학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준 도민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립대학교인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전남 지역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추진에 적극적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학령아동 감소 등에 대

한 해법으로 1도 1국립대 정책을 지향하

며, 선도적으로 통합하는 대학에 인센티

브를 지원하는 등 대학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30 대학으로 지정된 양 대학의 통합은 전국 최초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에서는 양 대학이 통합되더라도, 글로벌 지정에 따른 지원은 유지하고 대형 국책과제나 주요 시책 참여, RISE사업 등 통합 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추진 절차와 관련해서는 “통합 합의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양 대학에서 오는 ‘통합합의서’를 우선 교육부에 제출하고, 이후 ‘통합의대’ 명의로 오는 29일까지 한국과학기술인정평가원에 예비인증평가를 신청하며, 대학통합을 위해 12월 말까지 ‘대학통합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대학에서 ‘대학통합’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정부에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등 ‘느슨한 통합모델’에 대한 입법 지원까지 더해지면 ‘통합의대’도 순차적으로 탄력을 받아 2026년 개교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통합 합의에 따라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실현이 한 발 더 가까워졌으나,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이라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며 “의대 정원 신청은 대학의 이름으로 하는 대학의 일이지만, 정부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전남도도 우리의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남 국립의대 설립 확정 및 의대 정원 배정을 위해 대통령실, 국무총리, 정부, 국회 등을 설득하고 적극 건의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김 지사는 “양 대학 통합 합의에 따라 지역 상생과 화합의 길이 열린 만큼, 도민들께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전체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대가 설립될 때까지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시, 내년 인문학 산책길·콘텐츠 스퀘어 조성

亞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
신규·계속사업 등 64건 심의·의결

광주시가 내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으로 인문학산책길, 콘텐츠 스퀘어 조성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실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2026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의결 건은 신규사업 7건과 계속사업 57건 등 총 64건의 사업이다.

심의위원회는 광주시장, 광주시교육감, 5개 자치구청장, 시의원, 문화·관광·도시계획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차별 실시계획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별)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문체부가 수립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중

합계계획을 구체화하는 개별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는 실행 전략이다.

실시계획의 범위는 국가 직접 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동을 제외하고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등 3개 분야이다.

광주시는 보다 내실있는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기존 거버넌스형 수립체계에서 전문위킹그룹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난 2월부터 전문가, 유관기관 등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신규사업 7건과 계속사업 57건 등 총 64건의 사업에 대한 2026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실시계획은 문체부의 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의 틀 안에서 5대 문화권을 연계하고 도시 전체로 확산 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집중 발굴하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2026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광주 인문학 산책길 조성 △문화융합디자인으로 매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 △아시아 역사문화단지 조성 △콘텐츠 스퀘어 조성 △아시아 스토리텔링 통합플랫폼 구축 △언더그라운드 웹툰캠프 운영 △광주비엔날레 빛의 파빌리온 조성 등이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국제시각미술 문화도시 교류플랫폼 구축 △비엔날레전시관 신축 △아시아 이스포츠산업센터 구축 운영 △아시아 첨단문화기술 실증센터 구축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 △아시아 도시시간 문화교류 협력사업 등이다.

강기정 시장은 “전문위킹그룹 방식 전환 등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광주시는 아특별 일몰에 대비한 전략사업과 5대 문화권 연계확산 강화 등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속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026년 연차별 실시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편 실시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부처가 협의를 거친 뒤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에 보고되며 2025년 3월까지 승인하게 된다.

노병하 기자

정치참여의 기회를 갖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치후원금



모두 함께
세상을 바꾸는
노련극

정치자금(기탁금, 후원금) 기부 연말정산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후원한도

- 중앙당 및 국회의원후원회: 각 500만원까지
- 시·도의회의원후원회: 각 200만원까지
-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각 100만원까지
- *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금 기부가 가능합니다.



정치후원금센터
바로가기
www.give.go.kr

